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도자료

■ 제공일: 2026년 7월 1일

■ 제공자: 김상현 연구위원

전화: 061-820-2280

■ 배포부서: KREI 성과홍보팀

전화: 061-820-2127

■ 매수: 2매

■ 사진: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푸드 수출 늘수록 보이지 않는 장벽’도 높아져…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필요

KREI,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 통해 밝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위생·검역, 인증, 통관 등 이른바 ‘비관세장벽’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정보 탐색·제도 적응·인증 획득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수입 제한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는 위생검역, 기술규제, 인증제도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아 다른 산업보다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미국·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국가마다 요구하는 규정과 인증 기준이 달라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최근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이 대응해야 할 기준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연구진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 부담보다 훨씬 큰 경우도 많아 수출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소 수출업체는 해외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별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연구진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비관세장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수출업체 맞춤형 컨설팅 확대, ESG 관련 규제 대응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현 연구위원은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며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전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